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기만이다!
노동자/학생의 연대로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불안 해결!
대학생들의 실천으로 진짜 대안을 찾자!

12주년 Mayday 맞이



연세대 [대학생 대안찾기]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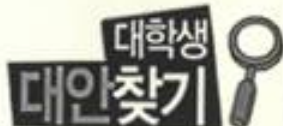
*CONTENTS

여는 노래 - 풀	2p
[대학생 대안찾기] 연세대 실천단장 인사	3p
대안찾기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위한 약속	4p
메이데이의 유래와 노동운동의 역사	16p
[대학생 대안찾기] 정세전망 및 기초해제	20p
[대학생 대안찾기] 체계와 마스터플랜 소개	23p
[교양자료 ①] 최저임금	25p
[교양자료 ②] 간접고용	29p
[교양자료 ③] 복지국가담론 비판	34p
[읽을거리 ①] 반전평화 - 군사훈련	38p
[읽을거리 ②] 생태/반전 - 일본 핵발전소 관련	44p
[읽을거리 ③] 11학번 새내기 집단교섭 투쟁 후기	47p
[대학생 대안찾기]가 추천하는 책	49p
노래를 배워보아요! ♪♪	51p



여는노래

풀 이동혁글,곡



세상이 지어준 아름다운 이름은 아녀도
어느 누구도 알아줄 진한 향기는 없어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낮설기만 해도
길 모퉁이 벽돌 틈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커다란 나무에 가려
따스한 햇살 한 줌 볼 순 없어도
무수한 발길에 차여
생채기투성이 작은 몸으로

매서운 바람에 지겹게 날려도
힘없이 꺾이지 않으며
작은 이 뿌리로 끈질기게 일어나
모진 삶을 이겨내야지

긴 하루가 지나가고 어둠이 스밀면
작은 풀벌레 벗 삼아 힘든 하루를 거두고

새벽녘 별빛보다 맑은 이슬을 담아서
다시 일어서지 내일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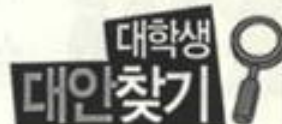


430-Mayday로 꽃을 피우려 열심히 달려갑시다

121주년 노동절맞이 [대학생 대안찾기]

연세대 실천단장 인사

48대 문과대학생회장 애숙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세대엔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왔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 찾아온 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그런 봄과는 다릅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봄을 연세대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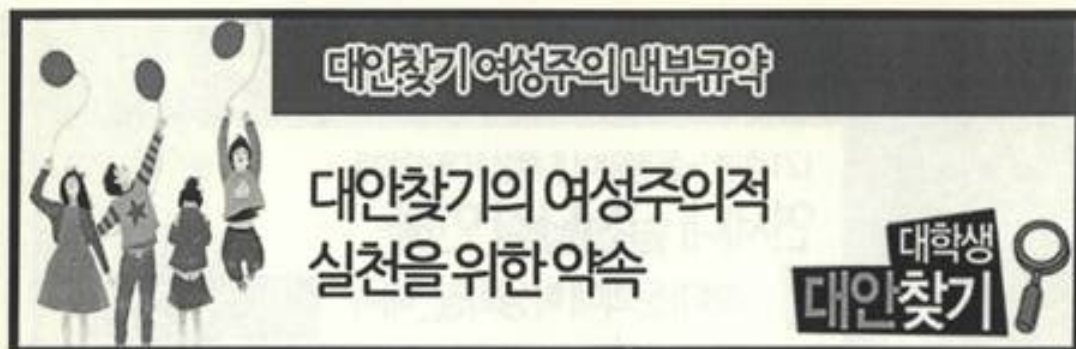
얼마 전까지 백양로에는 꽃 대신 플랑들이 알록달록하게 걸려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작업복 대신 노동조합 조끼를, 빗자루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건물 대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투쟁의 과정은 새싹이 껍질을 뚫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더 했습니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오지 않음을 알기에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봄을 찾았습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미화/경비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지금, 봄이라는 시기와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섭이 타결되고, 파업을 정리해서 다시 빗자루를 쥐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느 누가 봐도 살만 하다'라는 기준에 한참 미달합니다. 따라서 봄을 찾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끝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란 계절은 마지막/결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꽃이 피고, 다시 지고, 열매가 맺히는 이 과정에서 꽃이 피는 건 단지 한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싹을 내밀고, 꽃을 피웠습니다!

<대학생 대안찾기>에서도 올 해 4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의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안이라는 결실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과정의 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연세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연세대처럼 봄을 만들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실비실하기도 하고, 때론 싹이 세 나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됨을 다해 나오려고 합니다. 연세대의 봄은 연세대 노동자들이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함께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삶을 함께 원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찾아야 할 대학생들의 대안은 대학생들만의 봄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편적인 권리들이 확장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앞으로도 더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봄을 찾고 있는 다른 씨앗들과 만나서 서로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2011년 4월 한 달간,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공부하고/실천하면서 대학생들의 대안을 꽃 피우는 길에 실천단장으로 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430-Mayday로 꽃을 피우려 열심히 달려갑시다!



■ 여/남이 동등한 투쟁의 주체가 되기 위한 작은 시작, 반성폭력 자치규약 토론

여성들은 이렇게 원한다. 그녀들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를 주장하기를,
 그녀들 모두가 노동하기를, 새로운 성적 문화를 구축하기를,
 출산의 책임 있는 자유를 주장하기를, 그녀들 자신의 지성의 작품의 가치를 평가받기를,
 이성과 감성 양자를 지니고 자연스럽게 살기를,
 이 모든 것들은 여성들의 이익을 표현하고,
 또한 미래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좌파의 능력에 대한 거대한 정치적 도전을 표현한다.
 - 이탈리아 공산당 「여성현장」 中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사형 등등. 작은 아이와 소녀,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에 분노하며 사람들은 이들을 사회에서 추방시킬 때만이 성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가해자 일인을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놓는다고 해서 전 사회적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며 그런 사람들만 사라지면 이 사회는 성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폭력과 관련된 몇 가지의 통계만 살펴봐도 이러한 해결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2006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며, 직장인 여성 중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성폭력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 정신이 이상한 술취한 남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변사람에 의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벌하고, 이들의 성욕을 억압하는 여러 물리적-화학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성폭력은 해결될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런 성폭력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와 피해자에게서 격리시키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폭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사회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근대 국가에서의 '시민'의 정의와 현재의 여성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과 시민, 평등과 자유의 절대적 동일성을 규정-선언한다. 즉 모든 인간은 곧 시민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자유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시민권은 즉각 제한되었다. 이는 당시 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보통선거권이 여성에게 가장 마지막에 주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2011년,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알파벳과 골드미스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고시와 각종 시험에서 여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저출산 시대가 온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 탓이 아니겠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실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시와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여성이 많지만 결국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결국 남성이라는 점¹⁾, 여성 CEO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70%가 여성이라는 점, 또한 30대 이상의 여성 중 대부분의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양육 및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고 이것이 곧 여성이 저임금을 받는 현실로 이어진다는 점²⁾ 등등. 실제로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매우 모호하다.

특히나 경제위기를 맞이한 현 시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 해고 1순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바로 여성이었으며, 여성이 임신한 경우 바로 일자리에 쫓겨난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여성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는 또다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그녀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이 남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두운 밤길조차 혼자 마음껏 다닐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내가 성폭력을 당할지 몰라 항상 전전긍긍하며 택시 하나 마음껏 못 타는 것이 현재 여성의 현실이다. (매번 뉴스와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기사들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조심해도 막상 성폭력이 일어나면 '그러길래 왜 너가 짧은 치마를 입었느냐,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너가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녀들의 경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제 2의 성폭력 가해를 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는 왜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위에서 아주 짧게 살펴본 것처럼 여성이 여전히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올바른 사회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은 왜

1) 유리천장(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로, 여성 직장인들의 승진의 최상한선,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한다. 미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70년 만들어 낸 신조어)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용어가 존재. 즉, 취직 하기는 쉬워도 승진하는 등 기업이나 학교 등의 조직에서 여성은 쉽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2) 여성의 노동은 그저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는 수준의 노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이를 학원비, 반찬값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지금 사회의 현실이다.

일어나는가?

이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는 존재 없이는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통제를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사고 팔고, 아프지 않게 치료도 해주며, 한 명의 시민이 성장하기 위한 교육 등등의 '노동'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누구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칭송하듯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이 아이가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하기까지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다.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양육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이 사회는 제대로 유지조차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전체 사회의 통제 아래 두면서, 여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심지어 무급으로) 계속 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성에 몸 - 성욕, 임신, 출산, 낙태 등 - 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 - 순결/정조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욕을 드러낼 수 없게 하는 사회적 시선 - 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상품화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임신, 출산 등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현재 여성은 제대로 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이후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몸'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마음'에 대한 판단조차 여성들은 스스로 내릴 수 없다.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소유-자기통치가 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미로서의 성폭력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위에서 이야기한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성폭력은 현재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주변 사람 등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맺음에 대한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시작으로 반성폭력 내규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물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성폭력을 이해한다면 이를 지양하기 위한 운동은 ('반성폭력 운동'이라기 보다는) 페미니즘 자체이며, '반성폭력 내규'만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반성폭력 내규'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이상, '성폭력적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 성폭력적 사고/행동을 지양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은 철저히 '사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개인 간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에 '반성폭력 내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의 권력 관계를 고찰하고, 어떠한 사고와 행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반성폭력 내규는 정해진 '규율'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찰

하는 '과정'으로 사고해야 한다.

▶ 성폭력의 개념

우리는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과거 역사에서는 성폭력의 의미 구성에서부터 많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성의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경험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 은폐되기도 했고, 성폭력이 '정조'의 문제로 인식되거나 성기 삽입 여부로 파악되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의미와 범주를 확장하는 과정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폭력을 드러내고, 이름 붙이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지난한 역사 끝에 과거보다는 성폭력의 범주가 확대되기는 했으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성폭력이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다. 기존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침묵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정받기도 힘들다. 피해자에게 '순결을 잃었다' '더럽혀졌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옷차림을 문제 삼거나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아무도 '왜 돈을 들고 밤길을 다녔느냐'고 묻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능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피해자가 왜 저러느냐, 피해자 맞느냐'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우리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명확하게 비판하고, 그와 단절해야 한다.

보수주의적 시각에서는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인식한다. 이 때, 성폭력은 남성의 재산인 여성의 '정조'를 침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죄이며 그 안에 여성은 '주체'일 수 없고, '정조'를 침해당한 여성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져온다. 또 보호받아야 할 '정조'와 보호받지 않아도 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켜 여성들을 분할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와 결부시켜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복숨을 걸고 저항했는가'가 성폭력 성립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왜 그 당시에는 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지, 왜 남성과 그런 곳에 갔었는지 등등의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소위 '빌미를 제공한 여성'에게는 성폭력이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이런 보수주의적 관점과 정반대로 여겨지는 '자유주의'에서도 성폭력의 성립 여부는 복잡하다. 여성의 '거부'와 '동의'가 명확하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패러다임은 여성이 온전히 '거부'나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성별 권력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즉, 이는 성별 권력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권력 관계에서 약자로 존재하는 여성은 'yes'를 'yes'라 말하지 못하고, 'No'를 'No'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동의'나 '거부'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성적인 행동이 과연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이루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인지적, 윤리적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시각에서는 성폭력을 '행위'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 때 그 여성에게 스킨쉽을 했느냐/마느냐' 하지만 성폭력은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혐오감, 분노라는 감정은 본능적인 반사감각이나 즉각적인 인지를 통한 행위가 아니라 '맥락적' 상황에서 해석적 행위를 통하여 도달하는 이해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전후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행위가 아닌,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에 한계적이다. 여성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도, 동일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각기 다르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한다. 그렇기에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이것도 성폭력이다, 저것도 성폭력이다'는 식으로 성폭력 목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회복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자칫 잘못 이해되면, 성폭력은 피해자가 예민해서,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생기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거나, 피해자의 특수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섬세하게 관계맺음과 여성 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반성폭력 운동과 내부규약을 우리의 실천 속에 사고하자

우리가 반성폭력 내부규약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그 공간이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안도감과 면죄의식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규가 있으니 이에 맞춰 행동하면 된다' '내규가 있으니 우리는 여성주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고를 지양하자. 이 역시 운동의 성과임을 인지하며, 내규 제정이 가져왔던 긍정적 의미는 계속 전취해가되, '관계의 전화'와 새로운 성별 윤리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결국 문제는 행위의 변화를 추동해낼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관계를 여성주의적으로 전파시켜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약속이 오히려 역동적인 운동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상력과 실험을 계속해가자.

반성폭력을 공동체를 바꾸는 운동으로 사고한다는 말은 종종 개인의 문제를 방기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폭력이 특정 '행위'가 아니며, 개인 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공동체(나아가 사회)가 바뀌어야 진정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지하자.

1. 반성폭력 내규 적용 및 논의 과정

반성폭력 내부규약이 '강제'나 '형식'으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감과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내규는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의 내규는 어디까지나 '초안'이며 내규 및 해결과정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 번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규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을 강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계속해서 공동의 논의와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규는 진정 성폭력으로부터 합

계 자유로운 공동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내규 및 해설

1) 언어적 성폭력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자리,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재미를 빙자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행들이 관성적으로 있어왔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적상징,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행이나 불쾌감을 조성하는 언행,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자.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은 여학우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운동의 주체이다.

운동주체를 남성으로 한정짓는 언사는 무의식중에 발생한다. 민중가요 중에 운동주체를 '~형제여'라고 지칭하는 가사들과 각종 발언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노동형제', '형님'이라는 단어는 은연중에 투쟁의 주체를 남성으로 한정짓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표현들은 학생사회 내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었고, 일정부분 이를 바꾸어내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투쟁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변화되는 것로부터 그녀들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또한 '형'이라는 호칭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지칭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운동사회 내에서 남성을 일반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여성의 정체체성은 배제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한 성만을 일반화하는 '형'이라는 호칭보다는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란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일부 단위에서 '형'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몇몇 단어와 호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의 기저에 깔려 있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 전반을 바꾸어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일 것이다.

그리고 결렬한 투쟁을 하는 중에 "여성은 뒤로 가라"는 말은 여성을 투쟁의 방해꾼 내지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말로서 투쟁의 주체로 서려는 여성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힘으로 밀고 당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과 신체적 조건을 떠나서 투쟁하려는 모든 동지들이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수대를 선정할 때 "남성 동지들 나오세요"라는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 여성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종종 앞에 나와 발언을 하는 대상을 두고 외모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물론 이런 경우 대부분 앞에 나와 발언을 하는 대상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격려의 방식이 외모만을 기준으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는 때론 무대에 나온 동지들을 동지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대상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한가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심하게 성찰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은 성적인 단어를 통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적상징이나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상징과 성차별은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가와 투쟁구호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투쟁가에서 '흠어지면 죽는다(=된다)' 등은 성적상징을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 여성은 가부장적 여성다움과 성역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여자가 너무 나쁘다는 식의 발언은 가부장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말로서 여성의 활동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여성다움의 틀에 그녀들을 가두어 억압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청결도에 대한 기준이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현실에서 박 일정을 수행하며, '여자가 씻지도 않냐, 화장도 안하느냐' 라는 식의 발언은 여성이 투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애교구호'로 불리는 투쟁구호 등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이나 애교 같은 특성들을 왜곡된 형태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여성과 남성은 이성애 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동지로 함께 서 있는 여/남에게 '사귀어라, 사귀어라...'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여/남 모두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여/여 혹은 남/남이 사회를 보는 경우에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이성애 중심으로 사고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 사회 내에서 여/남의 올바른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폭력적이고 불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또한 맥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성을 남성의 자위를 위해 공인된 환상품으로 치부하는 가부장적 관념에 기반한 비이성적 행동으로 이는 여성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간혹 '친밀감의 표시'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곤 한다. 상대방의 볼을 꼬집는 거나 팔로 벽을 등지고 있는 상대방을 가두는 행위, 상대방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간질이는 행위,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은 종종 친밀감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물론 친밀감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는 친밀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쾌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손상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3) 성별 분업 : 여성은 성별화 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성별 분업이란 단지 여/남이 다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작업에 있어 미리 남자 일과 여자 일을 나누는 경향, 여학생의 노동능력을 미리 단정 짓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남성에게는 일이 과부하 되고 이로 인한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하며, 반대로 여성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일을 강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일/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전가시키지 말자.

각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전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여성에게 가사 노동을 전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선전과 같은 소소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남성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담당하곤 한다. 또한 깃발이나 사수대에 필요한 구성인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성역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투쟁에 있어서 여성을 주변화하게 된다. 투쟁에 있어 필요한 구성인원은 모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을 보살핌의 대상이나 누군가를 보살피야 한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에 비롯한 활동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한정짓지 않으며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사노동과 보살핌 등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가족의 다른 여성 구성원에게 고유의 경로와 학습을 통해 재생산되곤 하는데 이러한 여성의 일반화된 역할은 운동사회 내에도 연장선상에 놓여진다. 여성 활동가는 주로 저학번 활동가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공동생활을 진행해야하는 활동에서는 더욱 강제된다. 또한 결렬한 투쟁 시 여성은 선후배, 동기를 막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남성 동지들을 보살피기에 급급하여 정작 자신의 투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여성의 역할을 보살핌노동 등으로 강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정된 성역할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역할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4) 환경 : 여성은 그녀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으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남을 둘러싼 환경 자체를 성폭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성폭력을 유발/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방관하거나 논의를 봉합하지 않도록 하자.

계속되는 뻘뻘한 일정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방관, 봉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험이 부차화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생리하는 여성은 배려되고 적합한 환경이 보장되어야할 권리를 가진다.

생리는 여성에게 있어 다(多)출혈을 비롯하여 복부나 허리의 질환과 빈혈, 이로 인한 행동에의 제약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생활 주기의 변화와 과로한 노동량 등에 의해 자신의 신체 리듬과 맞지 않는 생리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박 일정을 진행해야하는 때에는 구성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생리하는 여학우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고통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하는 여학우를 위해 생리대는 물론, 전통제 등의 비치와 잠자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은 남성과의 성적 차이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남의 성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일정에서 공히 견지되어야 할 바로 사회의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의 분리와는 다른 문제의식이다. 가령 고유하게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며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역할과 부담을 부여하는 것 역시 여성 혹은 남성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남성성을 강조하는 굵고 큰 목소리와 유리한 신체적 조건이 선동에 적합한 모습으로 인지되어 여성동지가 발언하거나 선동을 할 때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투쟁하려는 여성동지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편견이 있다면 이를 버리고, 신체적 차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작은 여성동지가 나와서 발언이나 선동을 할 경우 대오가 그 발언과 선동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은 최소한의 여성들만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여학우들과 남학우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남학우들이 공간을 독차지한다던가, 여학우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심한 노출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간혹 벌어진다. 또한 활동에 있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여학우들은 많은 불편과 제약 을 느끼곤 한다. 실제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해왔고, 이는 지속적으로 여학우들의 행동을 통제해오고 있다. 따라서 여/남 잠자리의 분리 등 최소한의 여학우들의 공간을 분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역시 여/남이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배제적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은 '취해서 그랬으니까', '실수한 것이니까',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나보다' 식으로 다른 성폭력보다 쉽게 용서하거나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여성들이 술자리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술자리 성폭력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의 상황도 성폭력 정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며, 더욱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III. 해결과정의 원칙

1)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의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사건 성립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인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종

'피해자의 말만 듣는 것' '피해자 제멋대로 주의'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과 피해자의 말만 온전히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때, 피해자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즉, 사건의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남성의 인식과 언어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성별 권력 관계 때문에 실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 있고, 결국 발언력이 큰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쉽지만, 남성의 인식과 언어를 통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며 사건의 해결과정 역시 이에 준하여 대책위 등을 구성하여 해결한다. 그리고 대책위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처벌 역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일상적 권리와 지원 방안

사건 해결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를 수동적, 무기력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하기도 하며, 피해감을 강조해야 하는 딜레마를 겪게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 상처로 인해 힘들 것이라고 사고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지원과정에서 격려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게 고통을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가부장제 사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처의 치유는 문제를 덮어두고 피해자 스스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 재발견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소통과 지원은 고통의 '극복'이 아니라 남성의 언어를 극복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피해자의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2.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3.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
4.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5.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6.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
7.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8.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피해자 지원방안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들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재단하려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의 다른 사례와 판단들을 소개해준다.
-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비용을 부담한다.
- 피해자가 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대책위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망을 구성,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

신고되거나 문제제기한 모든 상황사건에 대해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평가, 1대 1 면담 등 대책위를 통하지 않는 방식을 통한 사건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대책위의 구성에 동의했을 경우 성폭력 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방식(가해자 공개, 사건공개 등)을 결정한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후 구성되며 대책위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이후 단위에서의 논의와 재교육 등의 후속 작업까지를 책임진다. 대책위는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더불어 대책위는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과 가해자 단위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대책위의 구성

- ▶ 가해자
- ▶ 가해자 소속단위 1인 : 가해자의 재교육 및 가해자 단위 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책임진다.
- ▶ 여성주체 : 사건의 접수 및 대책위의 구성을 책임진다. 또한 대책위의 구성 이후 사건의 해결까지 대책위 구성원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을 책임진다.
- ▶ 집행부 내 1인 : 성폭력은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투쟁체 안에서 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책위 구성과 이후 사건 해결과정까지 이를 공동체 내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 ▶ 피해자 대변인 : 대책위에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하여 전달한다.

(※ 대책위 구성 이후 더 필요한 성원이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참여할 수 있다.)

2) 대책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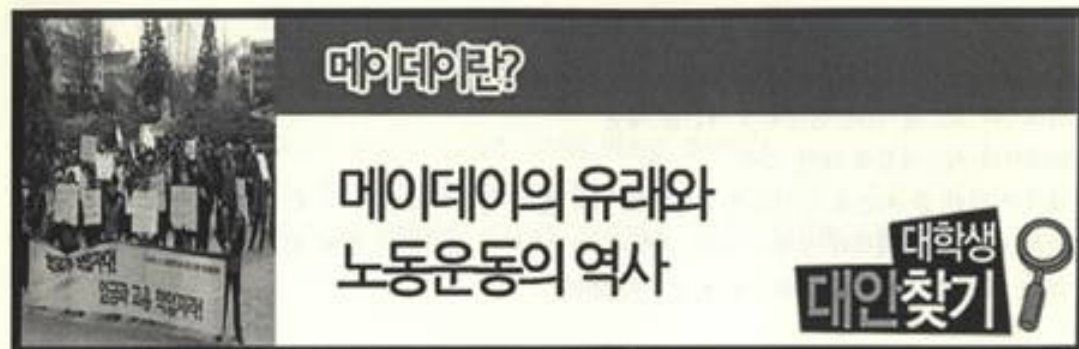
- ▶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사건해결
 - ▶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해결과정 추진
 -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 재교육의 프로그램 및 기간의 결정은 대책위의 역할로 하되, 이후 가해자 단위에서 진행을 담당할 주체를 선임한다.)

-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
- (※ 단, 모든 대책위 활동의 수위와 범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
 - ▶ 피해자의 치유과정에 대한 노력
 - ▶ 대책위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을 박탈하고 징계한다. 또한 대책위 구성과 활동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방기하는 자는 2차 폭력의 가해자로 규정, 징계한다.

IV. 신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란 공동체의 문제로 구성된 누구나 이를 공동체 안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어디까지나 사건의 신고 및 공개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430feminism@gmail.com



1. 메이데이란?



Thure de Thulstrup's imaginative depiction of events at the Haymarket, covering two pages of Harper's Weekly, May 15, 1896

적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알리자!’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메이데이는 전 세계 공통으로 5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메이데이의 유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121주년’을 보고 ‘아, 메이데이가 1891년부터 시작된 거구나.’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긴 하지만 정확한 유래는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시카고에서는 5월 3일까지 파업이 이어졌는데, 이 때 경찰이 파업 중이던 비무장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파업을 벌였던 날을 기념하고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메이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메이데이는 곧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기념일이 되어 121주

년을 맞는 지금까지 계속 일할 권리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민중들의 싸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 메이데이의 의미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과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자, 전사회적인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또한 전 세계,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확인하며, 그 동안 했던 싸움들을 돌아보며 변하지 않은 차가운 현실에 맞서 다시 싸우자고 굳게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은 단순히 전 세계적인 기념일을 정해, 힘들게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 쉬게 하자는 시혜적인 날이 아닙니다.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 - 일해서 사람답게 먹고 살 권리,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 를 빼앗아가는 전체 구조의 문제에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 - 죽음을 감수한 - 이 있었습니다.

첫 메이데이로부터 80여년이 흐른 뒤,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산화한 22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35년 뒤, 기륭전자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받으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서 시작한 그/녀들의 싸움은 6년을 동안 지속되어 힘겹게 끝났습니다. 2009년에는,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함께 살기 위해’ 물도 전기도 의료품도 끊긴 공장 안에서 77일을 싸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121번째 메이데이를 맞이한 2011년, 우리의 삶과 노동조건은 ‘노동해방’이라는 노동절의 목표와 정신에 결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져갑니다.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기존의 노동자들도 언제 갈려나갈지 모르며 대신 월급 등 각종 노동 조건은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진지 121년째인 메이데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다시 메이데이를 바라보며, ‘현실의 모순에 맞서’ 싸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 대학생들이 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해 온, 430-mayday

87년의 투쟁을 통해 전국에서 민주노동조합을 폭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자들은, 89년 100주년 메이데이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축제로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정권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심하게 탄압했고, 당연하게도 메이데이 행사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때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행사 장소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였습니다. 그리하여 89년 4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메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노동자들이 벌이는 투쟁의 축제인 노동절의 안정적인 개최와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94년에 처음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4월 30일 노동절 맞이 청년학생투쟁대회와 전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월 투쟁은 메이데이투쟁에 있어서 왜 대학생들이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후 꼭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기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430-mayday 투쟁은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싸우기 위한 중요한 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30투쟁대회와 문화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투쟁을 위한 장소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430투쟁대회와 문화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시기에 요구되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박에 없는데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은 노동자들과, 7전 8기란 말이 무색하게 이력서를 수십 통 돌려도 취직할 거란 확신이 없는 대학생들의 - 그 안의 불안은 - 달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일상처럼 해고와 임금 삭감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힘겹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학생이 한국사회에 대한 너른 시야와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에 기반해 사회 모순에 맞서는 싸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불안정해져가는 삶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일해서 먹고 살 권리를 말한 것이 바로 지난 430-mayday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4. 노동자 운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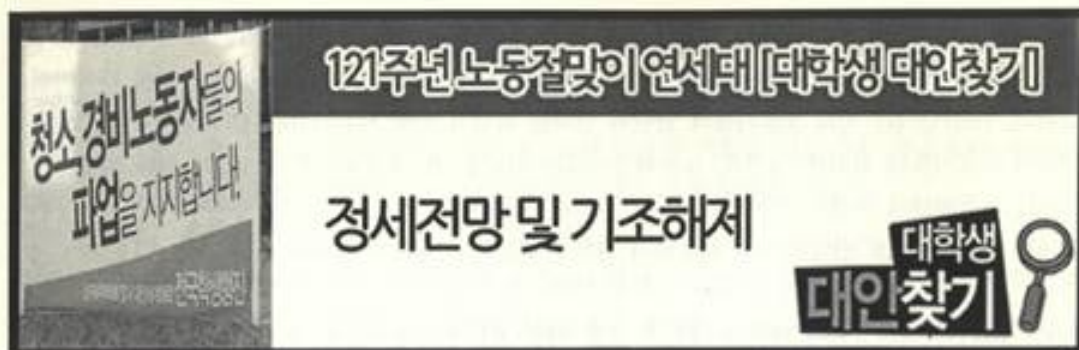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고 산업혁명이 발생한 19세기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예나 농노처럼 노동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노예나 농노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인신적인 예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는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서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은 마냥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노동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하는 것보다 농업을 지속하거나 구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유럽에서는 국가와 자본가들이 결탁해 앤글로저로 농민들을 토지에서 강제로 쫓아냈고, 도시에서 노동하지 않고 구걸을 하면 정신병원이나 저질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인신적인 예속에서의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고, 노동자들은 비좁고 더러운 주거환경, 장시간-저임금의 고된 노동, 관리자에 의한 매질과 수모를 겪으며 노동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모든 부를 생산해 내었으나, 자신이 생산한 노동의 과실을 결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권리'만을 가진, '임금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뿐이죠.

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은 그/녀들을 분노하게 했고, 다양한 저항을 낳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낳은 것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기계를 파괴하기도 했고, 자본가들에게 상태를 개선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으며, 옛날의 전원생활을 이상화하며 공동체를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는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전체의 구조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사회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후 유럽에서는 다양한 노동자운동의 세력들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세워 1848년의 2월 혁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864년에는 국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기 위해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을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가와 각국 정부의 관료들을 멀게 만들었고, 자본가/각국 정부들은 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파리로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이후 제1 인터내셔널이 사실상 해체되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새롭게 자본주의의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90년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체 국민의 1/8의 사람들이 차지했고, 최상층의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50%를 차지하던 최하층의 총소득보다 많았습니다. 850만 명 정도 되던 노동자들은 매일 14-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착취와 탄압이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인터내셔널의 투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잠재된 힘을 깨달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서 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메이데이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후 1820년대부터 계속되어오던 근로시간단축 투쟁들은 1886년 미국 하이마켓 광장에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1889년 제 2 인터내셔널이 결성되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파업을 벌였던 날을 기념하고,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정신을 현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의는 또한 미국 노동총동맹이 같은 날 벌이기로 계획한 8시간 노동일 쟁취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국제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기도 하죠. 1891년 첫 번째 메이데이 행사는 이러한 제2인터내셔널의 결의에 입각하여,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일의 쟁취라고 하는 공통의 요구를 위해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메이데이는 매시기마다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당면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며, 노동자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진행된 것이죠.



1. 2011년, 지금의 세계는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위기

지난 08-09년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를 휩쓸었고,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교적 잠잠해진 지금, 위기는 끝난 것일까? 세계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작년 11월, 'G20'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각종 신문이나 매체에 실린 G20의 풍경이란, 각국의 정상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위기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기업과 국가가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내놓는 대책들도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모토를 '기만적'이라고 지적하며, G20을 비판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던 움직임들은 오히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크게 말했던 목소리이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08-09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매커니즘인 미국의 부동산 시장·수출과 국제 문제가 바로 지금 어떠한지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에 목매고 있지만 이는 매우 한계적이다. 게다가 오바마는 위기에 대해 '경기부양책'이라는 하나의 대책만 내놓고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떨어지는 등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부실저축은행과 전세대란, 물가 폭등 등 뚜렷이 나타난 현상만 보아도 위기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또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이 모두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성은 가속되고, 그 속에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더 확장할 수도,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다면, 결국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자본이 아닌, 우리에게 명확한 답이 있는가? 사실 그 명확한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위기이다. 이런 와중에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세력들은 나름의 답을 찾으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은 대부분 '운동의 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오히려 정권 교체에 목맨 채 위기를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은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 논의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의 신자유주의 세력에 기대

고 하든 그렇지 않든, 통합과 연합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뚜렷이 어떤 목표와 전망을 하고 있는지의 고민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다.

2. 대학생 대안찾기 연세대 실천단 기조해제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기존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혼란이 찾아온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각자는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저마다 강구하게 된다. 전반적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배층이 나름대로 도출해 낸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실물축적-생산성 증대라는 선순환이 아닌, 끊임없이 노동자의 살을 깎아먹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며 이는 결코 옳은 것도, 장기적으로 유효한 것도 아닐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이 단기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고, 있던 법마저 개악하며 발버둥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들은 실업을 해결한답시고 일자리를 늘렸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극복'이 우리에게서 결코 '대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극복'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열심히 일하느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지'를 마주하지 못한 채 체념과 절망만을 연습하게 된다. 그 결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불안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노동자/서민의 불안임을 마주하는 것. 그렇게 나의 불안이 '너'의 불안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체념과 절망'을 버리고 '권리와 희망'을 말하는 것, 나아가 그 내용을 직접 구성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대선을 앞두고 난립하는 정당들은 저마다 '이것이 해결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내고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생 대안찾기 연세대 실천단 기조>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기만이다!
노동자/학생의 연대로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불안 해결!

-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기만이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기존 정부와는 조금 다른 흐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를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들고 나온 것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보통합 전략의 중심에도 '복지'라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정당이라면, 다른 대통령이라면 좀 더 나은 거라는 기대를 하

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국가 담론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 자체에 손대지 않은 채, 그 결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 자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직접 소득인 실제 임금을 올리는 대신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간접 소득을 채워주는 식인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가 애초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물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시도 없는 최근의 복지담론은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과 모순을 은폐시키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실질적 삶의 조건들의 개선이 필요함을,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거짓임을 말해야 합니다.

- 노동자/학생의 연대로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불안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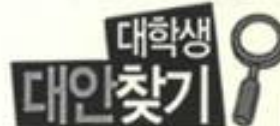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이제 사회 일부가 아닌 아주 광범위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시기, 임금이 낮아질 때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와 생존을 보장해주는 방어망으로 작동합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것도 바로 최저임금 제도이지요. 이번 집단교섭 투쟁에서 주요한 구호였던 '생활임금 보장'은 이 최저임금 이 '최고임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 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집단교섭 투쟁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지 임금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임금'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간접고용이라는 제도를 철폐하여 '고용불안'을 없애라는 요구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가고용전략 2020'등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실제 수요에 맞춰 파견 허용업종 32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광고 영업, 웨이터, 경리 사무 등이 간접고용 허용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직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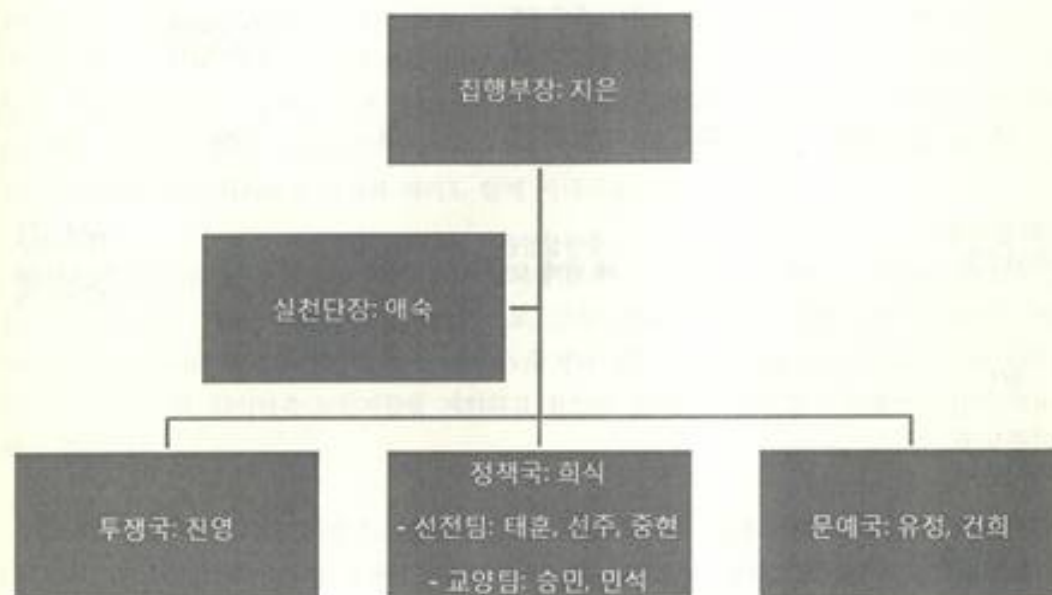


121주년 노동절맞이 연세대 [대학생 대안찾기]

체계와 마스터플랜



① <대학생 대안찾기>의 체계



② 마스터플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3	4	5	6	7	8	9
						연세대 발족식
10	11	12	13	14	15	16
실태조사 교양 전체발족식	< 실태조사기간 > 최임투쟁선포대회				중앙실천단 두 번째 모임	
17	18	19	20	21	22	23
			장애차별 철폐의 날		(430 문화제 공연연습)	
24	25	26	27	28	29	30
430 문화제 공연연습			중앙실천단 세 번째 모임	복지국가담론 강연회		★430 문화제
5/1						
이주노조 메이데이 노동절 범국민대회						

교양자료①

최저임금

대학생

대인찾기

1. 현행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여기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하며 '최악의 생활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빈곤층 일소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의미도 함께 지니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1990년 사업체 규모별로 10인 이상 전사업장, 1999년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그리고 2000년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왔지요. 그러나 예외로 동거의 친족, 가내 노동자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 액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당해 3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 각 9명으로 이루어지고,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 의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겉모양은 교섭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해도 과한 표현을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다음 해 1월~12월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

기관별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1.1~'11.12	4,320	34,560	5.1	'10.7.3	'10.8.3
'10.1~'10.12	4,110	32,880	2.75	'09.6.30	'09.8.3
'09.1~'09.12	4,000	32,000	6.1	'08.6.27	'08.7.23
'08.1~'08.12	3,770	30,160	8.3	'07.6.26	'07.8.1
'07.1~'07.12	3,480	27,840	12.3	'06.6.29	'06.8.3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2.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범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범위는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 및 평균임금 대비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1~35% 수준이며 임금 총액의 20~25%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풀타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턴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종사 노동자가 매우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최저임금의 적용을 제대로 받고 있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11.6% 중 정규직은 5.3% 이고 비정규직은 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자인 여성은 49.6%, 고졸이하가 89.8%, 55세 이상이 29.2%, 25세 미만이 21.5%로 기혼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4.5%이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 35~54살 인구가 40.1%, 55살 이상은 28.9%입니다.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 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 정도는 적어야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사장들은 그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은 현재 최저임금 정도는 주지만,
법으로 더 낮게 최저임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같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청주대 미화노동자

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금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최저 생계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143만원인 한 상황 속에서 한 최저임금(시급 4320원 기준 월 90만원)으로는 매달 적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최저임금 올리면 안 돼?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 4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 경영계 입장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아주 적게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 측이나 경영계 측입니다. 심지어 논리도 비슷합니다. 요지는 최근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재를 꺼리게 하여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타당하다든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 세시한 주장일까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저임금인상률(실질 최저임금인상률=7.1%)이 제조업 물적 노동생산성 상승률(7.0%),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7.1%)과 별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위 두 지표는 노동투입량 대비 생산품과 이윤에 대한 비율로, 이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말하지요)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 원-하청 구조의 후진성에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몇 배나 오르더라도 매년 5~10%씩 제품 단가를 깎는 대기업의 횡포에 울분을 토하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해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임금과 하청 기업의 남품단가를 깎고,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으면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을 꺼리게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실업자 4백만 시대, 청년실업 10%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의 고용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의 성과물은 노동자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급 4320원 월 90만여 원의 저임금노동자에게 현재의 고용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발상이 아닐까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³⁾

3) 미국 경제정책의 수장인 버냉키는 2006년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에게 경제학자들이 언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합의를 했냐고 되물기도 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렇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그 모든 감소분을 덮고도 남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 / 투쟁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시급은 모두 다 최저임금이에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 중 2년 조금 넘게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동안 월급이 2만원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게 최저임금 오른 수준하고 똑같더라고요" 4)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표준시급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최저수준의 시급이 노동자를 어떻게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지를 여론화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시급에 월급 120-150 정도 받으려면 전업을 뛰어야 해요. 밤늦게까지 매일 잔업하고, 주말에도 특근 나오고... 그래야 그만큼 벌 수 있어요." 5)

또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42%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률도 매우 낮아⁶⁾,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 삭감,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정리 해고 등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을 보호해 줄 노동조합 하나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유일한 임금방어제도인 것이지요.

5. 나가며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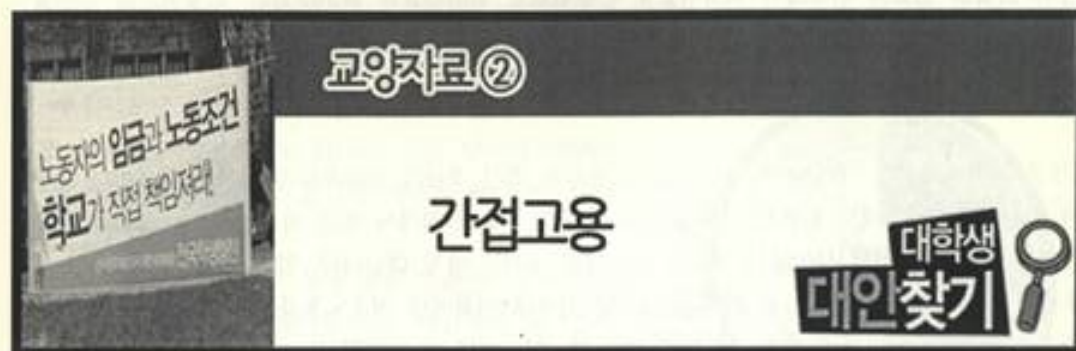
최저임금제도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는 자본가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어왔지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싸움들이 6월의 일회성 국회 점거 농성에 매몰되어 전사회적인 여론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싸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3일에 있는 '2011 최저임금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월례집회, 사회적 여론화 등의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 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제시한 숫자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험겨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4) 노동자의 미래 & 사회진보연대,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2011

5) 위의 글

6)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전체 노동자 중 노동조합가입률은 10.3%였고, 여성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6%에 불과하다.



간접고용 파헤치기!

1. 우리학교 노동자들은 왜 파업했을까?



올해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파업'이란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학교에서 집단 파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비인간적인 임금에 분노한 우리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집단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용역 업체의 탄압과 학생들의 지지가 계속되었고 지난 4월 7일 늦은 시각에야 교섭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학교 노동자들은 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4320원을 받으며, 제대로 된 휴게 공간도 없이 일해야 했을까요? 왜 그 분들의 문제에 용역업체가 끼어들고 노동자들은 소리 없이 해고될 것을 걱정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학교당국은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걸까요?

이러한 고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고용에 인력업체가 매개자로 참여해 근로 계약을 맺는 고용형태입니다. 사용자는 인력업체와 계약하고 인력업체는 노동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학교, 병원, 식당, 운송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간접고용'은 노동자가 실제 사업장의 사용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은폐할 수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어렵고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일자리의 주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이용하는 이유로 사용업체들은 인력관리의 원활화(32.7%), 비용의 절감(32.4%)을 들고 있습

니다.7) 이처럼 자본의 입장에서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리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맘대로 해고하거나 고용조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그러하듯이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과 일하는 내용이나 숙련도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훨씬 열악한 조건과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원청과 용역업체 사이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짜 사장 대 학총장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외치며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등 원청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절반이 월 15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8) 이는 전체 노동자의 약 40%에 육박하는 규모로서 '간접고용'이 굉장히 만연한 고용형태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간접고용이 만연해지면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비정규직이 겪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또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얻어야 하는 노동 기본권조차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특권처럼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 현실에 적응해갑니다. 스스로를 명문대학교 학생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타인의 것으로만 여겨지지만, 계속해서 노동 시장이 사용자 입맛에 맞게 유연해지면 언젠가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간접고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 고용 문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쩌하여 간접고용이 우리의 문제인지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합니다.

2. 간접고용이 도대체 뭐야? 뭐가 문제야?

사실 '간접고용'이란 말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며, 정확한 뜻은 전문가나 학회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견해 중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간접고용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 등 다양한 현상을 포괄합니다.

외주는 최종제품 혹은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 업무의 일부를 외부의 독립적인 업체에게 발주하여 납품받는 사업형태입니다. 편하게 아웃소싱 Outsourcing의 개념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도급은 외주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사내 도급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7) 보다 구체적으로 인력관리의 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고용조정 용이가 36.8%, 비용절감과 관련해서는 임금절감이 57.3%로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8) <MB정부 3년>노동 상황은... '간접고용' 확대 정책 일관>,최명애,경향신문 2011. 2. 23

하청업체에 고용되었으나 근무는 원청업체에서 하면서 원청업체 노동자와는 차별받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도급 개념은 도급 받은 업체가 또 다시 도급을 맡기는 '하도급'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도급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약은 채무자의 행방을 찾기가 모연해집니다.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종과 조건에 한해 파견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 파견업체의 노동자를 파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외주 중에서 특히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나 경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접고용은 주로 서비스 업종 등에 만연해 있는 근로 형태입니다. 학교기관의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대리운전, 택배서비스,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도우미, 방과 후 교사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상황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몇 가지 대표적인 간접고용 상황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청소 및 경비 관련 용역

원청과 용역업체의 도급관계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변화합니다. 이 때 노동자들의 고용 계약이 다음 용역업체로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으로 계약하는 용역업체가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사용자들이 편의를 도모해 다른 대안을 찾다면 기존의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교체될 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796,000원으로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식대와 4대 보험의 경우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비정규직법을 피하는 꼼수이기도 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은 주기적으로 용역업체를 교체하고 노동자들과 용역업체는 계속해서 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조업 하청, 파견 근무

'사용자들의 꿈, 100% 비정규직 회사' 동화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제조업에서 사내 하청의 형태로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9) '정규직은 왼쪽 바퀴, 비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겨운다'고 할 정도로 하는 노동은 비슷함에도, 2009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월 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파견고용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하청업체)가 아닌 사용자사업주(현대자

9)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은 54.6%이나 된다.

동차)의 근로 지시-통제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맥락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 업무 지시를 받아왔으며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3. 간접고용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럼 이러한 간접고용은 언제부터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간접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입니다. 이 때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제법이 통과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었는데도 자본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들이 해고되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서비스 업계에서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용역업체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과정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흐름과 맞물립니다. 더 이상 직접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단기간에 주식 시장에서 이득을 보려 하거나, 생산 대신 금융부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윤을 내려 합니다. 이를 위해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해고하기도 어렵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정규직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본래 포괄하던 많은 부문을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을 줄이고 고용 조정이 용이한 간접 고용의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신축화', '불안정노동'은 이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현재도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자본의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작년 현대자동차는 30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이 5조에 육박하는 등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거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규직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연 1천억 원 정도로 수익에 비하면 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역시 점차 국내 생산 부문을 줄이고 금융화를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해외 공장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금융 계열사에서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나 정규직화를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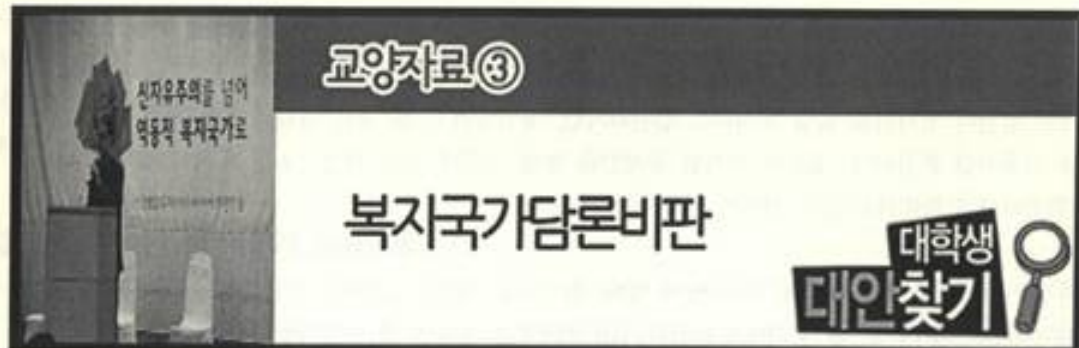


4.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간접고용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간접고용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실제 수요에 맞춰 파

견 허용업종 32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고 파견 수요가 많은 제품·광고 영업, 웨이터, 경리 사무 등이 허용 업종으로 검토되면서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직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 영역에 있던 간접고용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 더욱 우려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기업은 그나마 남아 있는 정규직들도 모두 간접고용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업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간접고용이 늘어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을 해도 가난한' Working Poor가 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 학교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간접고용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0. 들어가며

복지(福祉)란 무엇일까요? 복지 둘 다 복이란 뜻을 가진 말로 굳이 풀어 쓰자면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회 환경을 일컫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오래전부터 인생에서 한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진정한 무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개인이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데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물질의 분배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면서 그전에 교회나 일부 자선가들이 하던 자선사업과는 다르게 전사회적으로 법과 제도로 이루어진 사회복지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장으로 한 사회가 감당하는 부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물질의 생산수단을 거머쥔 소수의 사람들과 이들에 의해 고용된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소득의 양극화가 빚어졌고 특히나 도시의 빈민층은 비위생적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7~80년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아래 수출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 아래 농민과 도시의 하층민들은 수준 이하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지만 경제성장담론에 밀려 복지는 항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무상급식 논쟁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후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 이어져 민주당은 아예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오세훈)',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배은희 대변인)' 등 선정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고 오래전부터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던 박근혜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면서 한국사회에는 저소득층, 노인층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는 이들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와 입장을 확연히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누가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에 비해

현재 복지가 전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한국사회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많은 복지담론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입니다. 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대선시기에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지만 그 당시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복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논리와 전략>을 출판하면서 다시금 복지담론을 수면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이들은 북유럽식(그중에서도 스웨덴!) 보편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4대 영역¹⁰⁾으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역동적 복지국가론 과연 대안일까?

이러한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대두한 것에는 사회경제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하지만 이들의 말하는 대로 역동적 복지국가가 정말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일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들이 주로 쓰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말은 2000년 EU의 리스본 정상회담을 전후로 유럽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용어입니다. 당시 새로운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유연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죠. 유연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는 과정(기존의 종신고용인 정규직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유연해진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에서 생겨나는 구조조정을 감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말입니다.

10) (1) 보편적 복지

완역적, 선별적 복지와 반대되는 말로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는 제도임.

(2) 적극적 복지

기회의 균등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 증대 등을 포함.

(3) 공정한 경제

시장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경제는 민주정부의 강력한 개입, 즉 큰 정부가 필요함을 주장함.

(4) 혁신적 경제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지식기반경제구조의 사회가 되어야 함. 이에 따른 산업이 되기 위해서 생겨나는 최소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안정망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함.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하자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현재 가장 심각해지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례로 들어보면, 이들의 논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대로 놔둔 채 노동자들의 직접소득인 실제임금이 아닌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간접소득을 대신 채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쉽게 해고가 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현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즉 문제적 구조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 결과만을 건드리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본질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대표적인 저서인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논리와 전략>에서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 모델인데 이 스웨덴 모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나은 자본주의 모델로 스웨덴을 제시하지만 북유럽식 자본주의 역시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제3세계의 불평등한 착취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며 고에너지 고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웨덴의 복지 제도가 이토록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 데는 노동자운동이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에게 노동자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역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이미 상당부분 복지제도가 불가능해지고 있고 그 현실조건 자체가 흔들리면서 최근엔 복지를 주장한 사민당이 선거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3.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결 없는 복지는 기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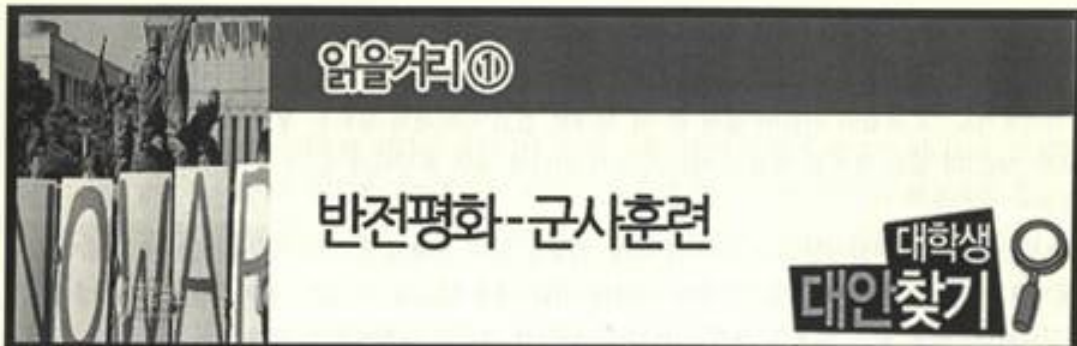
얼마 전 연세대에서 일어난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외침에서도 보듯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화된 일자리입니다. '노동'이 빠진 지금의 복지담론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히려 역동적 복지국가론에서 거듭 말하듯이 신자유주의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사회보험제도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민중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노동시장내의 이러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발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착취의 모순을 계속 은폐시키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4. 복지를 넘어 대안세계화로

복지제도를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07, 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놓여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마련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현 상황에서 누구도 확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사실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무상이 아니라 100%세금교육인 것이고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50%세금등록금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지에 대해 기존에 없던 것을 공짜로 새롭게 주는 것이라는 그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

동자를 더욱 착취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굶아가는 상처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는 약은 결코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도 그 몸집만 한없이 불릴 뿐 이 체제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것.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그 노동자에게 희망이란 얼마의 실업수당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울 좋은 역동적 복지국가담론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노동자 민중의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4월 메이데이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가요!



끊임없는 전쟁위협, 평화를 위한 길은 없는가.

- 위기의 한반도, 그 속에서 던지는 두 가지 물음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더욱 심화되는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



며칠 전 3월 26일은 천안함 사건 1주기였다. 하루아침에 46명의 장병을 잃은 대한민국은 모두 애도를 표했고, 정치권과 보수 언론들은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는 북의 도발에 꼭 철저한 응징으로 맞서야 함을 연이어 강조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해상에서는 대 잠수함 작전이 펼쳐지고 76밀리 함포와 별진포 등 해상 공격용 무기가

총동원되었고,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이 총출동해 가상 적지를 폭격하는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응징 의지를 담은 훈련이었다. 이렇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한의 북에 대한 분노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지만 갖고 이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 늘어난 국방비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의 증가는 아래 대통령의 담화문처럼 정당화되고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담화문에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담화문을 비롯하여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그 동안 연해 온 반공이데올로기와 공격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차분히 검토되지 못해왔던 질문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기억하며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첫째, 우리는 정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문제해결을 노력해왔는가. 즉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악랄함에만 있는가. 둘째, 대통령의 말처럼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진정한 '평화'를 불러오는가. 과연 엄청난 국방비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느냐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 : 군사적 분쟁의 원인은 북한의 악랄함에만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동안 실제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의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90년대 '교차승인'¹¹⁾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마일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남한-미국-일본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북한은 91년 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고립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93년 한미는 팀 스피리트 훈련¹²⁾을 재개하였고 94년 2월에는 한반도 유사시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북한을 군사 통일한다는 '작전계획 5027'까지 발표했다. 이는 '1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이후 클린턴 시대 때는 북한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상정하기보다는 유화국면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게 된다. 그러나 부시 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안보 정책은 변화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인 3대 테러국가로 지목,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북의 체제붕괴까지 불사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NPT 탈퇴, IAEA 감시요원을 추방, 핵발전소 봉인을 해제, 연료봉을 제처리로 맞섰다. 이것이 '2차 북핵 위기'다.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6자 회담'을 창안한다. 하지만 실제로 6자 회담의 실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첫째로 북한 핵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북한을 더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둘째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03년 8월 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북핵 포기'와 불가침조약 체결 동시 타결'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꺼냈으나 이는 단번에 묵살되었다. 이



11) 남북한의 어느 한쪽만 승인하던 나라들이 다른 한쪽도 정식으로 승인하는 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각각 승인하여 국제 정세의 긴장 완화를 꾀하였다

12) 팀 스피리트 훈련(team spirit training)은 연례적으로 실시됐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말한다.

후에도 회담이 전철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미국은 또 다른 압박 전술을 활용하여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6자회담은 사실상 미국의 모순적인 행동을 무마하는 다자적인 압력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 1월 콘돌리자 라이스가 북한정권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표현하면서, 북한은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를 선언했다. 미국은 금융제재(BDA 동결)를 가했고, 이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했다. 07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도발 → 위기 국면 → 유화 국면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띤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자 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연 미국과 남한은 진지하게 대화와 협력으로 임했는가 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던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과 남한은 끊임없이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들이대며 북한을 철저히 관리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알맞다. 또한 6자 회담이라는 다자간 합의물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대화의 창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공조를 형성하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위협해 온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북한이 훈련이 아닌 실질적인 공격을 해온 것, 그리고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렇게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남한과 미국이 그 동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해 해두어야 한다. 즉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원래 대화와 이성이 통하지 않는 망나니라는 점을 넘어서 그 동안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위협해 오면서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여왔던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질문 : 대규모의 군사훈련, 늘어나는 국방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자. 담화문에서의 대통령 말처럼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진정한 평화'를 불러오는가. 지금 상황을 토대로 위 문장에서의 '맞서는 용기'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1) 더욱더 공격적이고 대규모로 되어가는 군사훈련들 2) 국방비의 증가 3) 늘어난 국방비로 인한 무기체계들의 변화 4)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교전규칙들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은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다. 군 당국은 군사훈련이 전쟁억제력 강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군사적 충돌 위기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훈련' 그리고 지금은 '호국 훈련'으로 시행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과 이런 훈련의 배경이 되는 '작전계획 5029'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그리고 '작전계획 5029'

기존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반면 이번 훈련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인 '작전계획 5029 (CONPLAN 5029)'에 따른 것이다. '작전계획 5029'는 무엇인가? 작년에 일부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권

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기습 상륙시킨다."이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언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 점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위협천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호국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1992년 중단됐다가 1993년 북핵 위기 시 일시적으로 부활했으나 다시 1994년 중단되었다. 이렇게 팀 스피리트 훈련은 이미 예전에 중단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침략 성격이 명확한 훈련이었고 남북 관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최근 군사적 긴장과 함께 '팀 스피리트 훈련'을 '호국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다. 북한은 이 호국 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며 훈련 중단을 요청해왔으나 무시당하자 '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도발을 일으킨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군사훈련들은 한반도에서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이 말한 것처럼 이 훈련이 단지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이러한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조차 연평도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또한 혹자의 말대로 북한이 진정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한 국가라면,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눠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현없이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주류언론 및 보수집단은 주권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국군대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를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국의 영토 내에서 훈련을 벌인다고 하면 국경을 마주한 특정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고 인접한 국경에서 훈련을 벌이는 것은 그 의도가 정말 방어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를 침략할 수 있다는 의도를 밝히고 도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A라는 사람의 집 옆에 B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이 둘은 철천지원수이다. A는 B를 죽이려고 매 주 1회씩 A의 집 마당에서 맞은편 B의 집 담벼락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B를 죽이는 연습을 한다. A가 B를 죽이려고 연습을 하지만 A가 집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정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나 PSI 해상차단훈련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7월 동해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시행되자 중국은 인천과 마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100여대의 군용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서해 근처에서 창거리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렇게 지금의 한미연

합군사훈련은 중국 대 한국, 그리고 미국의 외교쟁점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같이 심화되고 있는 군사훈련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전쟁위험 고조를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 뿐 만 아니라 현 정권은 위에서 살펴본듯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국방비로 잔인한 무기들¹³⁾을 생산해내고 있다. 2011년 국방예산은 올해 29조 5,627억 원보다 6.2% 증가된 31조 4,03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이 넘어 정부와 군 당국은 여러 비판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겪으며 안보 불안을 이용해 당초 5.8%보다도 상향조정된 국방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증가는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 나라가 국방비를 증가시키면 다른 나라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패하

‘패하 뿐인 승리’를 향한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진정한 평화의 움직임을 시작하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눈 상황에서 평화가 온 적은 없었다. 그 결과는 끊임 없이 위기가 고조되다 결국 참혹한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일상의 행복들을 단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이다. 만약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평배했던 냉전 시기 서유럽 또한 헛된 군비경쟁만을 지속했다면,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다시 한 번 온 세계를 휩쓸었을까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당시 전쟁의 위험은 저지되었는데

13) 대표적으로 ‘집속탄’과 ‘대인지뢰’가 있다. ‘집속탄’이란 무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래 설명을 보자.

<집속탄: 한 개의 집속탄 안에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해 소폭탄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다시 소폭탄은 지상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예리한 파편들이 광범위하게 공격하게 된다. 소폭탄은 5-20%가 불발탄으로 남으며 이것은 대인지뢰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 2의 지뢰’라고 불린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3주 동안 미군은 1만 782발, 영국군은 2170발의 집속탄을 사용했는데, 뿌려진 소폭탄 수는 모두 200만 발에 이른다고 알려져있다. 그 중 약 9만 발의 고폭탄이 불발탄이 되었다고 추산된다. 소폭탄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안전장치가 제거되고 무언가에 닿으면서 폭발한다. 화약을 담고 있는 소폭탄 1개당 수백 개의 쇠조각이나 작은 구슬이 들어차 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개당된 소폭탄 가운데는 플라스틱 파편으로 채운 것도 있다. 이는 X-레이나 지뢰탐지기로도 감지되지 않아 체내에 박히면 제거하기 어렵다. 살상력을 높인 것이다. 집속탄은 개량을 거듭하면서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집속탄 생산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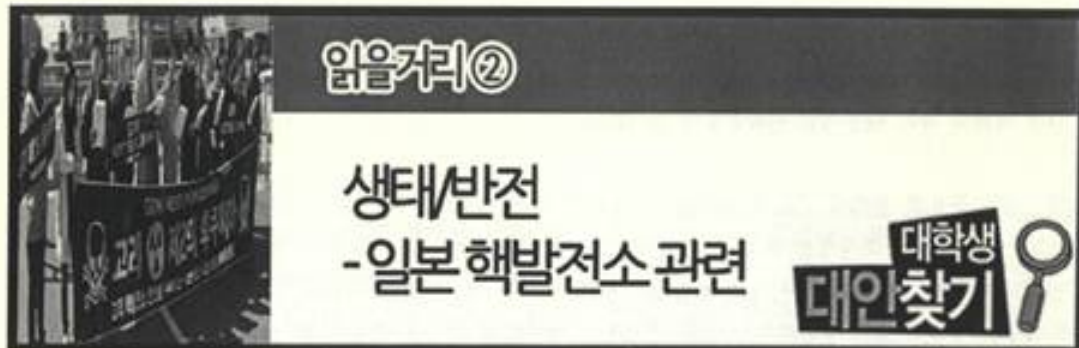
그 이유는 소련의 SS-20 미사일도,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2도 아니었다. 이런 미사일 배치 문제는 오히려 전쟁 위기를 급격하게 고조시켰을 뿐이다. 오히려 전쟁을 막은 것은 미사일 배치를 저지시켜 군사적 긴장 격화를 막은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북한은 원래 대화와 이성으로는 설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자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북한이 도발해온 것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위협해온 탓도 크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군사훈련과 전쟁준비는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인가. 정전을 넘어 종전으로 그리고 종전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1) 서로의 전쟁 위협만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 2) 남한과 북한 모두 지금의 엄청난 군사비용과 군대규모를 축소하고 진지하게 대화와 협력에 임할 것 3)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 및 대결기조를 철회할 것과 같은 반전평화의 요구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기,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노랫말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이 만든 그 모든 전쟁에서
승전국의 병사들과 패전국의 병사들은
너희가 만든 그 더러운 싸움에서 무엇을 얻었나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예를 얻었고
다쳐야만 얻을 수 있는 명예도 얻었지
패름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 고마운
자유도 얻었지
승전국의 병사들과 패전국의 병사들은
너희가 만든 그 더러운 싸움에서 무엇을 얻었나
너희가 만든 그 더러운 싸움에서 무엇을 얻었나

- 정운경, <시대> 중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통해 본 핵 발전의 진실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전체를 집어삼킨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재 사망자를 헤아릴 수 없음을 물론 이로 인해 야기된 핵발전소 폭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강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한 제1핵발전소 1-3호기의 원자로 냉각기능 상실과 1-4호기의 사용 후 연료 저장고 냉각기능의 상실은 연료 손상 및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이어졌다. 현재에는 1-6호 모두 외부 전원을 접속,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고 기기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고 냉각수 순환 시스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 폭발할 위험성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량의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은 높은 상태이다.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원자로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증기를 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사능 물질이 계속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지구 온난화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이야기되던 핵 발전에 대한 회의가 각 국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원자력 르네상스라 불리던 상황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사고는 최고의 핵 발전 기술과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위험천만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핵 발전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자랑하는 핵 발전 그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핵 발전에 관한 4개의 신화!

1) 핵 발전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인가

우리는 통상 '과학'이라고 하면, 모순되지 않은 전문적인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과학이라고 부르는 자연과학에는 매우 이질적인 실체들이 뒤섞여 있다. 과학이라고 해서 단일하고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이론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본의 저명한 반핵운동가인 다카기 진자부로는 도쿄 도립대학 이학부 교수를 역임한 원자핵 과학자였으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중의 편에서 '자립적인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하고 평생 반핵 운동가이자 시민과학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의 핵 발전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핵 발전을 맹렬하게 찬성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의 과학 기술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핵 발전과 같은 거대 기술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할 능력을 지닌 배타적인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때때로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서로 상이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가능한가

핵발전소는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상업용 원자로와 핵연료 개발을 주도한 제너럴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는 2차 대전 중에 핵무기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핵 발전이 핵폭탄의 원료인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평화적'으로 이용되던 핵이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이는 핵에너지 자체가 기술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용과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국의 군사적 이해와 핵마피아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핵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핵 발전은 친환경적인가

핵발전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석탄, 석유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발전소 관련 공익광고만 보더라도 넓은 숲과 들을 배경으로 초록색과 깨끗한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핵 발전은 기존에 인류가 사용해왔던 에너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일부과정만 살펴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 발전은 광대하고 복잡한 산업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발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우라늄 농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켄터키 주의 파두카에는 우라늄 농축만을 위한 화력 발전소가 두 개 있다. 화력 발전소를 통해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핵 발전, 이것이 바로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물론 핵발전소가 화력발전소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적은 농도가 풍부한 우라늄 광석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전체 에너지 소비 중 핵 발전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밖에 없기 때문에 핵 발전을 통해 온실효과 감축을 이루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원한다면 핵 발전에 주목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이 고소비-고폐기 체제를 유지하는 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고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 발전의 경우,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유출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유출은 용인하는 것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4) 핵 발전은 안전한가

이는 사실상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다. 핵 발전 옹호론자들은 핵발전소에 삼중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백만분의 일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핵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만들어내는 위험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사실상 방사능 물질이 대거 유출된 상업 핵발전소의 중대사고(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가 모두 당시 최고의 핵 발전 기술을 자랑하던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핵발전소가 갖는 안전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면적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세기 최대최악의 대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 등의 원인으로 91년 4월까지 5년 동안 7,000여명이 사망-70여 만 명이 피폭 치료를 받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욱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과 중저준위 핵폐기물로 나뉘는데,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오랫동안 뜨거운 열과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용 후 핵연료에 들어있는 세슘과 스트론튬은 600년이 지나야 자연 방사능에 가까운 방사선을 내뿜게 되기 때문이다. 핵 발전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한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의 핵 발전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자!

또한 민간자본인 도쿄전력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핵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할 것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결과 핵발전소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된 것처럼 핵 발전은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대다수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핵 발전 확대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 8기, 1990년대 7기, 2000년대 4기, 그리고 2011년 1기가 추가되어 총 21기가 가동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의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틀을 제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총 10-12기 정도의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신규 핵발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영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통해 핵 발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행을 허가되었다.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나 신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기에 수명연장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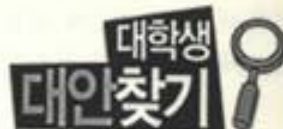
하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면 핵 발전이라는 에너지 발전 시스템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언제든 폭발하여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 발전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는 언제 핵폭탄으로 돌변해 인류 전체의 목을 겨누는 도끼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한국의 핵 발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과 같은 고에너지 소비 사회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석유에 기반한 지금의 고에너지 소비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이나 핵 발전과 같은 반생태적인 에너지 개발을 계속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핵 발전을 줄이고 화력 발전을 늘리자는 한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고에너지 산업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입을거리③

11학번새내기 집단교섭투쟁후기



★ 사회복지학과 11학번 조유리

날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면 백양로를 따라 파란색 조끼를 입은 청소노동자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멀뚱히 쳐다보는 나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괜한 걸음을 재촉했다.

본관 앞이 엄청 시끄러웠던 날도 있었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늦은 점심시간에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앞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떤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한데도 고개 돌려 볼 수 없었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없었다. 그러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겁이 났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척, 들어도 들리지 않는 척, 앞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갔다.

이상했다. 사람들, 곧게 난 길을 따라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분명 어디선가 청소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텐데, 교실마다, 화장실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눈감아준 바로 그 사람들일 텐데 나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침묵을 권하고 있는 걸까.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듯 보여도 실상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분명 나는 그 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데, 분명 나는 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데!

나는 나의 관심을 움츠리게 하는 그것이 '투쟁'이라고 생각했었다. 왜 하필 투쟁이어야 할까, 왜 싸우려고만 할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투쟁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했을 텐데,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수많은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투쟁이라는 것이 그 분들의 마지막 보루였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투쟁이 아닌 다른 방법 찾고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가 안정을 되찾은 이제야 나를 어색하게 만든 것이 '투쟁'이 아닌 투쟁을 보는 '시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 누구인을 싸우고 싶어 하고 싸움을 만들고 싶어 할까. 게다가

그 싸움은 '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친 약자들의 강자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누군가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이기주의이며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는 시선, 그것이 진실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학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나는 동안 지금껏 살아왔던 틀 속을 살짝이나마 벗어나게 된 것은, 새 내기의 어이없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준 선배들의 공이 크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뒤를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히 내딛는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 문헌정보학과 11학번 이지홍

아주머니들은 그럼에도 밝게 웃으셨다.

'파업'이라던가, '투쟁'이라던가 내게는 아직 낯설고 어색한 단어였다. 파업까지 감행할 정도로 그들이 절박한 줄 몰랐고, 투쟁이란 용어에 단순하게 과격함마저 느끼고는 거부감을 느끼던 어리석은 나였다.

그런데 그런 낯선 말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 분들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셨고, 감사히 청소해주셨다. 연세대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알고 사셨고, 비좁은 휴게실에서 찬밥을 드셨고, 작업복을 입으시곤 유령처럼 지내셨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되, 시야 밖의 주민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서 낮이 뜨거워지며 부끄러워했던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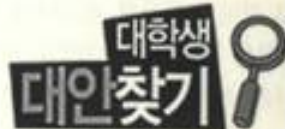
연대의 힘은 강하다. 그 분들은 학생들과 연대하셨고, 다른 학교의 동료들과 연대하셨다. 그 분들의 뒤에는 그 분들을 지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많은 용원이 있었다. 고되고 힘든 파업 기간 중에도, 나의 어머니를 되시는 분들께서 밝게 웃으시고선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지 않았으면 못 했을 거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분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더불어 연세대의 구성원이시고, 우릴 위해 새벽 첫차를 타시는 고마우신 분들이시다. 항상 뒤에 많은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이번엔 우리가 웃어 드리고 싶다.



121주년노동절맞이연세대[대학생 대안찾기]

추천하는책



★ 김진숙, <소금꽃나무>



브레이크의 시 중에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한 책 읽는 노동자가 나옵니다. 그 노동자는 의문을 가집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승리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 언제나 나와 있는 건 왕 혹은 정복자, 리더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분명 그 어떤 전쟁이든 업적이든 빛나는 승리의 역사든 한 개인만이 이룰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 노동자의 의문은 아마 웬만한 역사책이나 기록을 봐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숙 씨의 '소금꽃나무'를 본다면 그녀의 의문은 어느 정도나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소금꽃나무의 표지에 써져있는 글입니다.

아침조희시간에 나레비를 쪽 서 있으면 아저씨들 등쪽에 하나같이 허연 소금꽃이 피어있고 그렇게 서 있는 그들은 소금꽃나무 같은 했습니다. (중략) 황금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단 한 개의 황금도 차지할 수 없는.....

이 책은 김진숙 씨의 수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멋진 작가도, 그렇다고 말 잘하는 웅변가나 정치가도 아닙니다. 한 뼘장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잡하고 다채로운 이론들이 펼쳐져 있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소중한 그녀의 역경의 경험들이 써져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경험들입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너무나 가슴 아프게 깨달은 점들, 그 전까지는 그저 '그런가보다' 하며 지나갔던 것들이 그녀에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80-9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협박과 탄압을 받고 또 견뎌내면서 생각했던 점들, 과거 70년대에나 있었을법한 일들이 아직도, 아니 지금은 더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녀는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세상,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시대, 회사의 수익과 이윤을 위해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해도 별일 아닌 듯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생활하는 이 공간이 그리고 수많은 상품들이 어느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배를 뿔뿔하면서 거대한 배를 만들다가 사고로 죽은 동료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들, 소금꽃나무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감정에서 북받쳐 나오는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그 누구라도 상처 받고 감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그리고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은 상처 입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소금꽃나무를 읽으면서 진정으로 상처 입고 다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 권성연, 김순천, 진재연(엮은이),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수십 수백 번은 가 봤을 대형 마트들.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곳들의 계산대엔 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었다. 그저 내가 물건과 돈을 내밀면 계산해 주는 이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처럼 느껴지는 그녀들이 의자 없이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밥은 먹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에서 '유령'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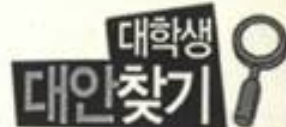
이 책은 바로 그녀들, 이랜드 그룹의 대표적인 대형 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1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열악한 휴게공간과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따뜻한 밥 한 번 먹기 힘든 나날들, 이랜드 회장 박성수가 직접 고른 색깔의

립스틱을 모두 똑같이 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이 지어야 하는 미소-. 그녀들의 삶은 책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숨 막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그 삶을 깨고 나온 그녀들의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이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나 유령 취급을 받고, 민주노총 위원장마저 무시코 '아줌마'라고 호칭했던 그녀들이 일을 멈추고 당당한 외박을 시작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이랜드 그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랜드에서도, 홍익대에서도, 연세대에서도 그녀들의 꿈은 늘 소박한 것이었다.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은 사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권리였고, 그렇기에 그녀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 우리를 위해 그녀들이 앞장섰던 싸움이었다. 이 세상의 모순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움직임이었다. 그 소박하지만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꿈이 당연한 현실이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



121주년노동절맞이연세대[대학생 대인찾기]

노래를 배워보아요 ♪



1. 입을 위한 행진곡

'입을 위한 행진곡'은 모든 민중의 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례'라는 시간을 통해 불리는 노래입니다. '민중의례'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입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도 알아보시다!

보통 우리는 공식적인 행사 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국민의례'를 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민중의례'는 태극기 앞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맹세하는 대신, 지금까지 역사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삶을 바치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민중'들을 기억하며 진행되는 의례입니다. 그런 '민중'들에게 누가 있을까요? 80년 5월 광주에서 군부독재에 맞서 일어나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광주의 민중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다공들에게 가혹하게 주어지는 노동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며 분신자살한 청년 전태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택배비 건당 수수료 30원을 인상해달라고 파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이기자'라는 말을 남기고 3년 전 메이데이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열사 등등이 생각납니다. 4월 한 달 동안 억압과 순응이 아닌 해방과 변화를 꿈꾸며 의미 있는 실천들을 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나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다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 온 민중들을 생각하면서 '민중의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중의례'는 크게 두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위에서 이야기한 민중들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합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노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숨진 시민군 지도자 윤상원 열사를 기리며 만들어진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81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러 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2. 인터내셔널(international)가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가
체르노비치에서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피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의 소리가 매섭게 외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오!

머리칼이 솟구치고 온 몸에 강한 전류가 흐를 듯한 이 시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예심판사 앞에 선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다.
어리다 못해 첫비린내가 날 것 같은 16살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사봉을 들고
고압적으로 앉아있는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는 곡은 다름 아닌 <인터내셔널> 이었다.

4.30 청년학생투쟁문화제 순서 중 마지막은 '인터내셔널 가'를 다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내셔널 가의 역사와 의미도 모른 채 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겠지요. 이 글을 통
해서 인터내셔널 가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고 2011년 현재에 이 노래를 부
르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터내셔널 가는?

<인터내셔널>이 탄생한 곳은 1871년 프랑스 파리. 계속되는 실정으로 민심을 잃은 나폴레옹 3세의

제 2제정은 한술 더 떠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대책 없이 항복하려는 무능력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자코뱅, 블랑키스트 등이
주축이 된 혁명세력들은 파리를 중심으로 자치정부인 코뮌을 형성하게 된다.

파리 시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80여 명의 코뮌 평의회 의원들 중 상당수가 노동자였다. 이
평의회 의원들이었던 '외젠 포티에'는 훗날 전 세계 혁명가들의 노래가 될 <인터내셔널>의 가사를 쓰
게 된다. 모든 국민의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집세와 만기수표의 지불유예, 노동자 자주관리와 집단소
유,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 징병제와 상비군 폐지, 인민군 창설 등 당시로서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이
고 급진적인 조치들을 위한 파리코뮌은 마르크스로부터 유일하게 세계 최초의 노동자 민중 자치정부
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72일 만에 기존의 보수반동 지배세력들에 의해 수만 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
면서 무너졌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민중 자치정부 실험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 위대한 실험에 대한 숭고한
기억은 외젠 포티에의 시에 담겨 혁명가 <인터내셔널>로 남았다. 이렇게 혁명 속에서, 수만 명의 피
울음 속에서 탄생한 <인터내셔널>은 인류 최초의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1917년에 드디어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소비에트연방
의 국가로 <인터내셔널>을 채택한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하고 러시아 혁명의 세례를 받은 <인터내셔널>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회
주의자들로부터 공식 혁명가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혁명을 꿈꾸는 모든 곳에서 <인터
내셔널>은 그곳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었다.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날이 있다. 그 것은 바로 5월 1일, 노동절이다.
이 날이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열고 각자의 언어로 된 <인
터내셔널>을 부른다.

⇒ 전 세계의 <인터내셔널>가 궁금하지 않나요? PLsong.com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1년에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인터내셔널 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터내셔널 가가 파리코뮌 당시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했
었지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 노동자, 서민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이 넘
도록 죽도록 일했지만,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해 수많
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며 일어났던 민중들의 혁명
이 바로 '파리코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파리코뮌 같은 상상력과 시도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2011년 지금까지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빈부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 어쩔 수 없다며 변화를 향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재의 문제를 비판해나가는 사람들의 노래 역시 '인터내셔널
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혁명을 꿈꾸는 이들의 노래 '인터내셔널 가'를 배워봅시다!

1절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험하게 타오른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 후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험하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2절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매인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 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 반복

3절

억세고 못박혀 굳은 두 손 우리의 무기다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오른다

* 반복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3. 집회/문화제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들

- 비정규직철폐연대가

1.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 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 연대의 발 맞춰
군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 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2. 나서라 하청 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군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 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비정규직 철폐 투쟁!

- 연대투쟁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진군이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강철 같은 연대투쟁 전진뿐이다

*그래 너희에게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있지만
우리엔 신념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투쟁) 연대의 깃발
들어라(투쟁)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 단결투쟁가

1.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땀의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꺾어 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
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감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
찾으리라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2.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망쳐되어 죽창 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 선전 분열의 음모 꺾어 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
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 들고 우리는 간다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 민중의 노래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피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위해 너와 나 한목숨 바쳐
노동자도 농민들도 빼앗긴 자 그 누구도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 깃발 험하게
독재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다짐 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세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라 민중이여

* Memo

* Memo